

수출 가로막는 '新 3高시대'... 3% 성장률 발목잡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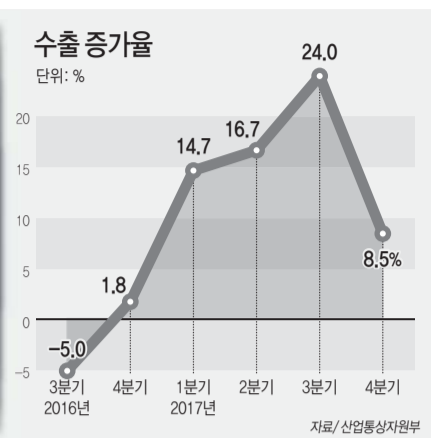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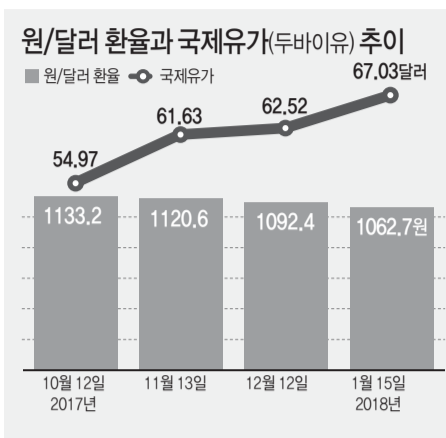
(고원화·고금리·고유가)

韓경제 성장세 하방요인으로 작용
호황업종 지속세 끊길 가능성 제시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걸림돌

최근의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세계경제 회복세와 이에 따른 한국경제 수출 호조로 정부가 올해 3%대 성장을 자신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 힘입어 한국은행도 오는 18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발표한 2018년 한국경제 성장률(2.9%)을 3%대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올 들어 달러 대비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원화(고원화)와 고금리, 고유가 등 신(新) '3고(高)' 현상이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세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통상 '3고' 현상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가계에도 부담을 가져온다. 수출은 물론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들어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끈 반도체 등 업종의 수출 호황이 올해에는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된다.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도 한국경제의 걸림돌이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우리 수출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금융시장 불안정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 '3고' 현상 등 수출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출 증가 추세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수출 총력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해 들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강세(환율 하락)를 보이는 등 좀처럼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인다. 금등락을 거듭하던 원·달러 환율은 16일 오전 10시 현재 1065.80원을 기록하

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지지선인 1100원에서 1070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1050원대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오전에는 올 들어 장중 최저가인 10601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31일(1052.9원) 이후 4년 2개월여 만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란 점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최근 '조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한국경제는 수출 중심의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질 경우 한국경제도 휘청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1050원대 환율을 마지노선

으로 보고 있다. 환율이 그 이하로까지 떨어지면 현대기아차는 수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 갤럭시 등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업계도 이에 따른 대규모 평가손실이 우려된다.

대신증권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세를 이끄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경우 원·달러 환율 10원당 영업이익은 2000억원 내외로 영향을 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해 첫 날 1060원대 초반까지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외환업무 담당자들이 올해 환율 전망치의 수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달러 약세(원화 강세) 현상을 반전시킬 요소가 뚜렷하지 않아 1050원선 아래로까지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 지난해 말 6년 5개월 만에 0.25% 포인트 인상한 국내 기준금리(연 1.50%)도 부담이다. 기업 입장에서 대출금리 인상은 채무 상환부담을 높이고 원화 절상을 가속화시킨다. 환율과 연동될 경우에는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로 인해 가계 소비도 위축될 수 있다. 이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는 국가 경제를 잠식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최근의 고유가도 골칫거리다. 국제유가

의 상승은 국내 수입물가 상승과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국내 경기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60달러를 넘어설 경우 국내총생산(GDP)에 0.22%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 80 달러까지 오르면 0.96%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실제 배럴당 50달러 중반대였던 국제 유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오름세가 계속돼 현재 60 달러 중반대까지 치솟았다. 15일(현지시각)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70.26 달러(브렌트유)로 70 달러를 넘어서는 등 지난 2014년 12월 2일(70.54 달러) 이후 3년여 만 최고치를 찍었다. 시장에서 이 같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석유 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에 따른 석유 재고 감소와 올해 하루 150만 배럴가량 석유 수요 증가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올해 유가 전망은 보다 상향 조정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한·미 FTA 개정 협상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두 국가와의 FTA 협상이 어떻게 풀릴지가 큰 변수"라며 "신 '3고' 현상을 잡기 위한 정부 대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서 체감되는 中企정책에 집중”

文대통령-중기·벤처인 청와대 만찬

“사람중심경제 中企 활성화가 핵심”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대통령과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이 16일 청와대에서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지난해 하반기에 이들을 독대하고 정책 애로를 청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들이 새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부처 출범도 미뤄지면서 해를 넘겨서야 만남이 성사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애정은 상당히 두텁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말 치러졌던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중소기업계에 러브콜을 보내며 당시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약속은 두 번째 대선 후보로 나와 당선된 지난해에서야 실현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도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8% 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경제로 바꿔왔다. 수출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

해서다. 그 핵심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있다”면서 “올해도 이런 정책 방향을 틀림없이 추진하고, 특히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생계형 적합업종 적극 보호 ▲청년 신규 고용 확대 지원 강화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대책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개편 등 지난해부터 발표했거나 예정인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에게 힘을 불어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과 중소기업계의 청와대 첫 독대 자리엔 중소·벤처기업 주요 단체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우수기업, 창업 혁신기업, 소상공인, 재기업 등 26명의 기업인이 두루 참석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대표 답사를 통해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새로 신설한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대통령의)관심과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與 ‘드라이브’ vs 野 ‘브레이크’... 개헌 난항

정책안 등 국회 문턱 넘지 못할 것
한국당 내부 벌써 ‘보이콧’ 조짐도

여야가 대부분의 현안들에 대해 대립하며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여당은 개헌·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야당은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들 문제들은 올해 안에 결실을 맺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이 ‘강한 대역(對立) 투쟁’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이상 정부·여당의 정책안·협상안 등은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들 현안들을 두고 벌써부터 ‘국회 보이콧’ 목소리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16일에도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국회가 사각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려는 참인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버리면 국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은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 제대로 된 여야 협상은 안 될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연히 검찰과 국정원은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사각특위를 만들고 정보위 차원에서 관련 활동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도위만까지 하면서 ‘끼어들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청와대를 상전 모시는 듯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아내지 못한 한국당의 꼴이 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 개헌 동시 국민 투표 관련해서도 그는 “지난 연말에 여야가 어렵게 국회 본회의 합의를 통해 올 6월30일까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기간을 정했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민주당을 아바타 취급하고 국회를 거수기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기다려보다가 국회에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 개헌으로 가겠다고 선포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여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오른쪽)가 16일 서울 마포구 케이티홀에서 열린 서울시장 신년인사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발목잡기’·‘아무 말 대잔치’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헌법개정특위가 어제(15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개헌 저지를 공언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특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고 기존 합의를 무시하는 강짜를 부렸다”며 “한국당의 ‘아무 말 대잔치’ 같은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신년사는 누가 봐도 조속한 개헌을 당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나 정권 연장 시도로 매도하는 것은 개헌 합의를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교육부, 8세 이하 자녀 둔 직원 ‘10시 출근제’

교육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남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방식을 대상자 전원 일괄 적용 방식으로 변경해 보다 많은 직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 키우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 10시 출근제’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직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할 수 있다. 기존에는 9시 이외의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10시 이외의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만 운영지원과에 신청해 승인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키우는 직원에게는 의무적으로 1일 1시간을 부여해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1시간 준다. 육아시간제 대상 직원은 11명이다. /한용수 기자 hys@